

2022 기획세미나 <국제이주와 통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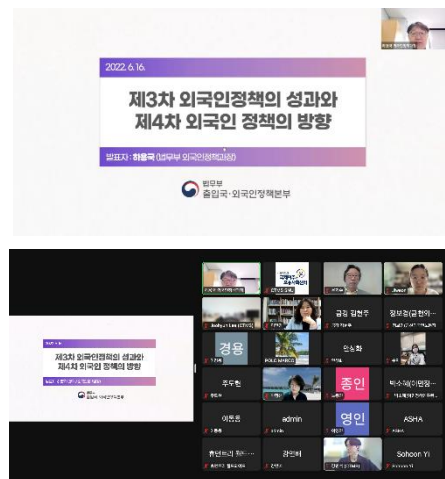
- 주제 : 제 3 차 외국인정책의 성과와 제 4 차 외국인정책의 방향
- 일시 : 2022. 6. 16. (목) 10:00~11:30
- 장소 : 비대면 Zoom 화상회의
- 연사 : 하용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과장)
- 사회 : 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센터장)
- 주최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 주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후원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Open Society Foundations

발표 및 자유토론 결과 요약

이번 기획 세미나에서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을 소개한다. 외국인 정책의 기본 계획의 의의, 2018~2022 년까지 시행되는 제 3 차 외국인 정책의 성과·개선점 및 정책환경 분석, 2023 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 4 차 외국인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민 정책 분야의 국민 여론 수집 및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과정, 국적법 개정과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논의 등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연다.

* *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외국인정책은 국경·출입국 관리, 국적부여 및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을 뜻한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정책 지침서라 할 수 있으며,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관계부처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08년에 1차 외국인정책이 시행되었고 현재 2022년은 제3차 외국인정책의 마지막 연도로, 2023년도부터 시행될 제4차 외국인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제 3 차 외국인 정책(2018~2022)의 목표

목표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이민정책에서 개방 관련 논의, 그 중에서도 기존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에서 오는 이주민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는 국경에서부터 출발하여 이주민의 체류, 귀화, 사회통합 등의 논의를 포함한다.

목표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제 1차 외국인계획의 경우 결혼이민자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점점 결혼이민자의 자녀, 외국인 2세의 사회 통합, 사회 안전망 구축, 이민자 체류 자격에 따른 복지 혜택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목표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안전은 국내의 기존 구성원들이 이민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이와 관련하여 제 3차 외국인 정책에서는 국경 관리, 체류 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하였다.

목표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의 맥락에서, 여성, 아동, 취약 이민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등 이주민과의 공존을 목표로 한다.

목표 5.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이민정책은 국내 정책이지만 국경, 이민자의 원 국적 등 국제협력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민정책 수립 시 유엔난민기구나 국제이주기구와의 다자 협력, 이민자의 본국과 한국 간 양자 협력도 고려하여 국익과 국제사회 목표에 모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환경 분석 첫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각국은 엄격한 국경 통제, 관리 등으로 이민정책을 조정해왔고, 개방/안전/협력이 국경관리의 핵심 키워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경을 폐쇄하고 살 수는 없기에, 향후 국제 이민 협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여 생산성 문제를 체감하게 됨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더불어 아시아 주변국들도 생산 가능 인력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우수인력 및 노동력 구축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민정책 연계의 심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축소사회, 지역 소멸 위기 등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이민 정책을 논의 중이다.

마지막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019년 국회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민확대 찬성이 51%, 반대 49%로 현재 국민 여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유학생,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 현안에 대해 내외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 *

자유토론 요약

Q: 제 3차 외국인 정책의 특별히 잘된 점, 특별히 아쉬운 점이 있는지? 이민 찬반이 정확히 나뉘었다고 언급했는데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예로, 유럽에서는 반이민 정서와 이들의 집단화, 세력화 경향이 강한데 한국은 이와 비슷한지, 아니면 동아시아의 지형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A: 제 3차 외국인 정책의 경우 대면 계획이 많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반이민 정서 관련, 최근 유엔난민기구 등 난민 분야 민간 기금 지원액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한국도 유럽 못지 않게 심하다고 생각한다.

Q: 일본에서 숙련외국인제 수용에 나섰다고 했는데 앞으로 한국도 노인 돌봄 분야 인력 수급 계획이 있는지? 위원회 형태는 부처가 나눠져 있어서 실제로 정책을 실행·총괄할 때 법무부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와 같은 센터에 바라는 역할은 무엇인지?

A: 먼저, 일본은 2019 년부터 간병인을 대거 수입하는 체제를 수립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으로 노인 돌봄 분야가 난항을 겪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의 사례·정책을 참고하여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내부 논의 중이다. 위원회 중심 정책 추진 구조 관련,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잘 조정해서 나아가는 외국인정책의 틀이 아직까지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와 협력하는 부분 관련, 오늘처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 좋은 출발점인 것 같다.

Q: 정책환경을 분석할 때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집하는지? 주로 참고하는 자료가 있는지, 특히 연령·직군·정치성향별 등 국민을 세분화한 여론 관련 자료가 있는지?

A: 국민 여론 관련, 국민 참여단을 통해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정책 1,2,3 차 수립 당시 자문위원회, 세미나 등을 통해 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했지만,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여론 자료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를 모두 참고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통계청과 연계하여 외국인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Q: 체류 외국인이 200 만명 또는 250 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류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A: 외국인정책 수립 시 권역별 미팅을 진행한다. 제1,2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결혼 이민자의 육아지원 논의가 많이 나온 반면, 이번 제 4 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미팅에서는 계절노동자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이전까지는 해당 지자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만 고려해온 것과 달리, 이제야 비로소 지자체가 실질적인 이민 유입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이민정책 체계에 있어 지자체의 협업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점을 느끼고, 이번 제 4 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의 수요와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 중이다.

Q: 최근 미등록 이주아동 양성화 방안은 매우 의미있는 행정조치라 생각하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단속·추방 외 다른 방안을 모색하진 않는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성화 방안 논의가 있는지?

A: 미등록 외국인 자녀 관련, 제 3 차까지는 국내 출생 아동과 국외 출생 아동을 분류하여 정책화했다. 첫째, 국내 출생 아동은 부모가 국내에서 불법 체류인 상황에서 아이를 출생한 후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고, 둘째, 중도 입국 자녀(=국외 출생 아동)는 국외에서 출생한 아이를 데려온 부모가 불법 체류가 되어 아이까지 불법 체류가 되는 경우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엔 최근 출생 등록 문제도 활발히 논의하는 등 불법 체류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부모의 불법 체류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이고 제 4 차 기본계획에서도 반영할 예정이다.

Q: 제 4 차 외국인정책에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새 정부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의 경우 보건학적 측면에서 우려가 되고, '중점과제 5-1'인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와 불합치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한데,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 운영 기본 방향과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A: 법무부는 현재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6 월 「국민참여단」을 모집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관련,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휴식권·건강권을 강화하고, 보호시설의 자율성·개방성을 확대하여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예로, 지난 4 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시설 일부를 개축하여 시설 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화기·컴퓨터 등 생활편의 물품사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인권친화형 시설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정리 : 이유림 인턴

감수 : 강민석 연구원